

## 〈書評論文〉

車基璧 · 朴忠錫 編

## 『日本現代史의 構造』

(한길사刊, 1980年)

吉 昇 欽\*

## 1. 서 언

일본의 대다수의 학자는 자기나라의 과거의 정치사회사를 소개하는데 있어서 1868년의 명치유신 이후 1945년까지의 戰前시대 하게 되면 마치 「공동체의 원리」 「가족국가관」 「國體護持」 「藩閥政治」 심지어는 「전체주의」 따위가 모든 것인양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전후의 일본이 누리고 있는 비교적 발달한 민주정치력 경제성장력 따위는 마치 하늘이 갑자기 가져다 주어서 생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戰前의 일본사와 전후의 일본사 간에는 계속성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전자와 후자 간에는 단절성만이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평가하면 일본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전후의 일본정치의 민주력, 일본의 경제력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車基璧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의 朴忠錫교수가 편찬한 『日本現代史의 構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자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이 책에 실려있는 논문 중에는 일본의 과거사는 주로 공동체적 가치관을 강조하였다는 주제의 논문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한 일본의 과거사는 비공동체적 가치관, 즉 합리주의적 현대적 민주적 결사적 가치관도 강조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일본의 전전·전후사간의 계속성을 보여주는 논문도 실려있다. 다시 말하면, 전후의 일본이 비교적 발달한

\* 서울대학교 社會大 助教授(政治學)

민주력,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戰前의 일본에 저려한 가치관이 배양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도 실려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丸山眞男 石田雄 中村菊男 等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글로서 모두 아홉편이다. 책에서는 이들 아홉편의 논문중 明治시대 이후 전후의 1960년대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적인 성격의 논문 네 편을 묶어서 제 1부를 만들었고 明治 이후 약 100여년 간의 각 시대(전후시대도 포함)의 정치사상의 구조·특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 논문 다섯 편을 묶어 제 2부에 배치했다. 책에서는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 근·현대사의 중요한 용어 및 사건해설과 일본 근·현대사 연표를 작성, 제 3부에 수록해 놓았다. 여기서는 제 3부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제 1부 및 제 2부에 실려 있는 논문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 이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다.

## 2. 이 책의 내용

우선 과거 明治유신 이후의 일본의 정치사를 다룬 논문(橋川文三의 논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정치권력의 집중화 과정이다. 明治시대 이전의 德川시대에는 정치권력이 江戸에 있는 幕府와 전국의 약 280여개의 봉건영지의 통치자인 大名에게 분산되어 있었다. 이른바 幕藩의 2중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1868년 이후 明治시대에 들어 오면서, 이상과 같이 분산된 정치통치력은 京都에 있는 천황을 등에 업은 4개의 藩(봉건영지)출신, 그것도 이들 4藩의 하급무사들에게 집중된다.

4藩이란 일본 本洲의 서남지역 말단에 있는 長洲(지금의 下關), 九洲섬에 있는 薩摩, 肥前, 四國섬에 있는 土佐를 말한다. 이와 같이 4藩에 집중된 정치권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1880년대쯤<sup>2)</sup>가서는 더욱 집중되어 薩摩, 長洲의 두藩 출신의 明治공신들이 거의 독점하게 된다(p. 22).

정치권력이 이와 같이 소수의 明治공신들에게 집중되니 자연히 이에

대한 반항그룹이 생기는 법이다. 크게 세 그룹이다. 첫째는 德川시대의 봉건영주였던 大名출신들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차 정치의 중심세력에서 제거된 4藩 중 土佐출신(板垣退助 後藤象二郎) 및 肥前출신(大隈重信)의 명치초기의 공신들이다. 두번째 그룹은 德川시대의 무사출신들이다. 이들은 당시 일본국민의 약 6%에 해당하는 40만호(가족까지 합하면 약 200만명)로 德川봉건시대에는 사회신분적으로 특권을 누리던 그룹들이다.

이들은 명치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사회신분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과거의 특권을 박탈당하고 명치정부하에서는 封祿을 받는 신분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1876년에는 이 封祿마저 나오지 않게 되고, 또한 그들의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帶刀마저 금지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굴욕감은 극에 달했었다 한다(p.15). 물론 이들중 상당수는 명치전황의 친위병이라든가 1872년에 설치된 징병제 및 각종의 여타 직업에 흡수되었지만, 이러한 것에서나마 제외된 무사출신은 자연히 반정부파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첫번째 두번째 그룹은 1877년에 소위 西南전쟁을 일으켜 마지막 항쟁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고 만다. 세번째는 서남전쟁 때문에 유발된 인플레이경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1880년대 전반기중 몇년간 松方正義 大藏卿에 의해서 가혹하게 집행된 디플레경제정책이다. 디플레경제하에서 타격을 받는 그룹은 농민 특히 지주계급이며 중소영세기업인이다. 따라서 이들은 세번째의 반정부파로 등장한다.

이상 명치초기의 정치권력의 소유자와 반항그룹간의 대립은 그 이후 일본정치를 두 갈래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 갈래는 정권소유자인 소위 藩閥派가 자기들의 정권을 장기화하고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일본정치를 국가위주의 정치, 공동체 위주의 원리, 가족국가관에 입각한 정치로 이끌고 간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권의 장기화를 위한 천황大權 보필기관의 설치와 제도화이다. 우

선 1884년에는 명치공신 및 舊大名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일종의 귀족제도인 公侯伯子男의 다섯개의 작위로 구성된 華族제도를 설치한다. 이 신분제도는 세습제이며, 작위에 따라 일정액의 재산도 부여되며, 1890년 국회개설 후에는 귀족원의원직을 가질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명치공신 및 舊大名 등에 대한 일종의 포섭책이라고 볼 수 있다. 1885년에는 내각제도를 설치, 천황의 직속하에 둔다. 장차 국회개설시 국회의사에 좌우되는 내각제도를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다. 1888년에는 樞密院을 설치하여 황실법, 헌법, 법률, 조약, 칙령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국무사항을 담당하는 기구로 장차 개설할 국회로부터 정부측의 지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1890년에는 헌법공포와 동시에 민선의원인 중의원과 함께 勅選의원인 귀족원을 설치한다. 이외에도 천황대권 보필기구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소위 元老제도이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주요 국사자문에 응하며 구성원은 보통 수상직을 지낸 경험이 있는 원로정치인들이다. 명치정부가 국체를 호지하기 위해서 세운 두번째 것은 군국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명치군국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長洲출신의 山縣有朋에 의해 1898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군부대신무관제라고 한다. 각료중 육군상 해군상은 현역군인이어야 한다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13~36년 기간에는 예비역에게도 大臣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완화됐다가 1936년 다시 1913년 이전의 제도로 복귀했지만, 바로 이 제도 때문에 군이 일본정치를 左右할 기반을 갖게 된 것이다.

명치정부가 국체호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번째 것은 市民을 臣民으로 만들어서 일본국민의 충성심을 천황에게 집중일원화시키는 작업이다(石田雄의 논문). 明治이전의 徳川시대에는 충성심이란 보통 각 봉건영주인 大名과 그들의 직속부하인 무사계급간 또는 大名과 幕府간에나 있었던 현상이며, 일반대중에게까지는 그것이 요구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각 무사계급의 충성심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직속상관인 大名에

대한 것이지 저 멀리 있는 幕府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石田雄의 논문, pp.105~106. 河野健二의 논문, pp.158~159). 따라서 중앙 집권화를 기하려는 명치정부로서는 충성심을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했어야 했으며 또 그것을 천황에 대한 것으로 일원화했어야 했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지주계급 또는 寄生지주들을 정부가 우대함으로써(20세기에 접어든 후의 이야기) 그 댓가로 이들로 하여금 당시 일본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들의 시민화 정치화를 방지케 하는 것이다(石田雄의 논문, p.102).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충성심·애국심 따위를 시민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1890년의 교육勅語가 좋은 예이다. 그러나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의 노일전쟁, 1914~18년의 1차대전 이후에는 서구의 합리주의사상, 소련의 사회주의사상 등이 마구 도입되기 때문에 교육勅語만으로는 시민의 市民化작업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무기인 「가족국가관」이 援用된다(石田雄의 논문, p.112).

이상은 명치정부가 일본정치를 국가위주 공동체위주의 정치로 끌여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는 1930년대에 와서 그대로 파시즘과 연결되어 결국에는 태평양전쟁으로까지 가다가 외세에 의해서 와해되고 만다(丸山眞男의 논문). 이미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대다수의 학자는 자기나라의 과거사를 소개하는데 있어서 이상보아온 국가주의 정치가 마치 일본의 과거사의 전체인양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에는 이상과 같은 측면도 있으나, 또한 다른 측면인 비공동체적 가치관, 합리주의사상,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했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일본에서 합리주의가 싹트게 된 것은 저 멀리 德川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일본은 중국의 주자학을 통하여 소위 華夷사상이 지배하던 때이다. 그러나 중국이 아편전쟁(1842), 태평천국난(1861) 등으로 서양세력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일본의 佐久間象三(1811~64) 같은 선각자는 서구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명치일본

의 가장 저명한 福澤諭吉(1834~1901)은 서양의 자유주의 작품인 토크빌(Alexis Tocqueville), 록크(John Locke), 루소(Jean Jacques Rousseau), 밀(John Stuart Mill), 스펜서(Herbert Spencer) 등의 책을 통해 서양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등의 가치관을 일본에 소개하는데 진력했다(中村菊男의 논문, 松本三之介의 논문).

영국에 군함이 1,000척이 있고 우리에게도 군함이 1,000척이 있으면 반드시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필경 사물의 균형을 모르는 자의 생각이다. 영국에 군함이 1,000척이 있다는 말은 단지 군함만 1,000척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1,000척의 군함이 있으면 상선이 10,000 척이나 있고 상선이 10,000척이 있으면 선원이 100,000명이나 있을 것이다. 선원을 양성하려면 학문도 있어야 하고 학자와 상인도 많고 법률도 정비되고 상업도 번창하여 인간 교제의 사물이 갖추어져 1,000척의 군함에 상응할만한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군함을 1,000척 가져야하는 것이다. (丸山眞男 논문 pp.218~219. 원래 福澤諭吉의 文明論之概說에서 인용)

이상과 같이 합리주의, 「民力」, 「국민의 생활력」을 강조하는 福澤의 사상은 福澤選集 등을 통해서 일본의 지식층은 물론 일반대중에게도 널리 읽혀짐으로써 일본의 자유주의사상 天賦人權論 등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丸山교수는 명치 초기에는 國權論과 民權論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했으나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상호간에 괴리가 생기다가 점차 국권론이 우세하게 되었다고 한다(丸山眞男의 논문, pp.217~20). 그러나 『日本現代史의 構造』에 실려 있는 다른 논문들에 의하면, 일본은 1894년의 청일전쟁 이후에도 大正민주주의시대가 있었고, 1차대전 이후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 심지어는 1917년 볼셰비키혁명을 거쳐서 새로이 설립된 소련의 사회주의사상도 체험했고,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 吉野作造의 民本主義, 美濃培達吉의 천황기관설(황실도 여러 정치기구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설)도 생겼으며, 합리주의·자유주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黎明會, 新人會, 民人同盟會 따위도 1차대전 직후에 조직되었다고 한다(中村菊男

의 논문, 三谷太一郎의 논문).

이상은 사상적인 측면이다. 정치사를 보아도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명치시대의 일본의 반정부파들은 1874년의 「民選議院設立建白書」를 필두로 해서, 1880년대 초에는 自由당 改進黨 들을 꾸며서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결국에는 1890년의 명치헌법에 衆議院제도를 기능화시킨다. 중의원은 민선의원이므로 자연히 정당제도를 전제한다. 정당제도의 출현은 정부시책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90년 당시 일본의 정당은 일본정치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일단 수립되고 나니 그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간다. 우선 1890~94년에는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정부파의 民黨이 중의원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정부의 준비확장에 산을 계속 부결시킨다(橋川文三의 논문, pp. 24~27). 1900년에는 명치정부의 핵심인물인 伊藤博文이 정당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政友會를 꾸민다. 1912년에는 명치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국권론자인 山縣有朋의 추계자 桂太郎 마저 입헌동지회(후에 헌정당)를 꾸민다. 1925년에는 종전의 제한된 선거권이 25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주어지는 보통선거제도가 수립된다.

이후 1924~32년에는 언필칭 정당내각의 전성기를 맞아 정당이 일본 정치를 좌우하게 된다(橋川文三의 논문, 三谷太一郎의 논문). 이 당시의 일본정치는 무산계급에게는 아직 응분의 발언권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당시의 정치를 제대로 갖추어진 민주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에 저 정도의 민주정치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본정치에 있어서 반정부파의 민권론 자유주의 사상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면서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거듭하다가 영·미를 등지게 하고, 거기에 세계경제공황과 군벌의 파시즘의 등장으로 「암흑시대」를 걷게 된다. 戰後의 일본정치는 국권론

이 물러나고 민권론이 前面에 나서게 된다. 한 때 미·소양국의 냉전체제 때문에 정치가 다소 국권론쪽으로 기울어졌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권론을 강조한 戰後의 일본헌법 태두리내에서의 逆行에 불과한 것이다(大西典茂의 논문).

### 3. 필자의 평가

정치사회학자는 사회를 분석할때 보통 사회를 크게 2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농촌적, 전통적, 민속적, 원시적, 공동체적의 형용사로 표현되는 사회로 「공동체적 사회」(Gemeinschaft)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도시적, 현대적, 산업적, 자본주의적, 결사적 등의 형용사로 표현되는 사회로 「결사적 사회」(Gesellschaft)라고 한다.

사회를 이와같이 2분해서 분석한 학자는 독일의 퇴니스(Ferdinand Tönnis), 프랑스의 더카임(Emile Durkheim), 독일의 웨버(Max Weber), 미국의 파슨스(Talcott Parsons)등 거성 사회정치학자들이다. 이들은 이상과 같은 사회의 2분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공동체사회 및 結社的사회가 각기 지니고 있는 특징을 평가하고 있다. 공동체사회에서는 「공동체」라는 말이 보이고 있듯이 사회의 가치관을 공동체의 구성원보다는 공동체 그 자체에 더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은 공동체의 가치관속에 매몰되어 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으나, 반면에 저러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가치가 강조되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안정유지 더 나아가서는 특정정권의 합법화 국가관 애국심 따위의 확립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결사적사회에서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가치관보다 그 사회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가치관이 더 강조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회다원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원동력도 바로 이러한 사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물론 칼 마르크스가 말한 疎外(alienation) 현상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너무나 비정적이고 냉정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으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창조력을 발휘시켜 주기 때문에 사회발전이론가들은 사회가 공동체사회에서 결사적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사회의 발전, 사회의 합리화, 사회의 민주화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은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한때에는 공동체적 가치관이 주로 강조되어 「암흑시대」를 겪은 적이 있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이다. 또 제국주의의 길도 걸은 나라이다. 그러나 1868년 명치유신 이후 1932년까지의 일본의 역사를 보면, 前記한 공동체적 가치관, 결사적 가치관 두가지의 가치관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배합하여 「안정」도 확보하고 「民力」도 키우면서 「국력」을 배양한 나라이다. 1932년까지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공동체적 가치관보다 結社的 가치관이 점차 우세해져서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는 비교적 발달한 민주정치 자본주의를 체험해 본 나라이다.

2차대전 이후의 일본이 정치적으로 민주적 역량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도 구미선진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일본이 과거 정치적 「民力」 경제적 「民力」을 키워본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결 론

이상은 이 책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아쉬운 점 두가지만 지적하기로 하겠다. 하나는 비교정치론적인 입장에서 다룬 논문도 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국력도 키우고 민력도 키우면서 성

장한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웃인 중국·한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근대화·민주화작업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비교정치론적인 입장에서 다룬 논문도 실었다면, 이 책의 가치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아쉬움은 1945년 이후의 일본정치사회사를 이 책에 소개된 논문정도의 분석력을 가지고 다룬 논문도 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물론 이 책의 大西典茂씨의 논문은 「전후의 정치·경제·사회의 방향」을 다룬 것으로 특히 미국의 점령당시의 정치사에 대한 분석은 잘 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깊은 분석을 안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한 두가지 아쉬움은 편자들의 의도가 아닐지도 모른다.